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영향

정영식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금융팀장 (ysjeong@kiep.go.kr, Tel: 044-414-1141)

양다영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원 (dyyang@kiep.go.kr, Tel: 044-414-1223)

차 례

1.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고조
2.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전망
3.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영향
4. 시사점 및 대응 방향

주요 내용

- ▶ 향후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① 2017년 상반기 중 단행 ② 2017년 하반기 이후로 계속 연기 등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대별되고, 현재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상황
 - 시나리오 ①은 미국이 자국경제 우선이라는 목표에만 집착하고 내부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데 주력하며,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반발할 경우에 발생
 - 시나리오 ②는 미국과 중국이 환율문제에 대해 상호 절충점을 찾아가는 실리적 접근을 취할 경우에 발생
- ▶ 상대적으로 충격이 큰 시나리오 ①의 경우 교역촉진법상 제재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보다 중국의 보복 대응 등 미·중 갈등 고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①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②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③ IMF를 통한 환율압박 ④ 무역협정과 연계
 - 제재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 고조 및 중국의 대미 수출에 일부 영향
 - 직접적인 영향에 비해 중국의 보복 대응, 미·중 간 갈등 고조,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에 따른 교역 둔화, 금융불안 등 간접적인 영향이 더욱 심각
- ▶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시 한국에 대해서는 원화 강세 압력과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수출 및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영향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준(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미·중 갈등 고조,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에 따라 중국 등 세계 교역이 둔화되고, 환율 및 통상 분쟁이 한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참여 제한,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에 비해 일부 유리해질 수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우리 정부는 미국 정가의 움직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미·중 갈등 확산, 세계경제 불확실성 고조 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필요
 - 한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 요인보다 저유가, 인구 고령화, 기술 경쟁력의 차이, Global supply chain 등 비환율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
 -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고,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불확실성 고조, 글로벌 금융불안 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

1.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고조

가. 동향: 트럼프의 등장 이후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고조

■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를 크게 제기하였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을 지속

- 대통령 선거 당선 이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
- 트럼프는 중국과 관련해 △ 환율조작국 지정 △ 불법 수출보조금 지원에 대한 미국 법원 및 WTO 제소 △ 중국이 불법행위를 지속할 경우 관세부과 등 대통령에게 주어진 모든 법적권한 사용 등을 언급하고(2016. 6. 28),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2016. 1. 17)
- 엔저 정책을 펴는 일본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등 인위적으로 저평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임.
-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음.
- CNN 보도(2016. 11. 15)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의 취임 후 200일 계획 메모에 ‘취임 100일에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표 1.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전후 주요 발언

	일자	내용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2015. 11. 3) 신간 ‘불구가 된 미국(Crippled America)’	•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저평가하는 국가들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 비난
	(2015. 11. 10) 공화당 경선 4차 TV 토론을 앞두고 배포한 정책 백서 및 관련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	•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① 집권 후 중국을 즉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② 중국 내 지적재산권 준수를 의무화 ③ 불법 수출보조금 및 느슨한 노동환경 기준 폐지 ④ 협상력 제고를 위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미군 증강 등 미·중 무역관계 개혁에 대한 4대 계획을 발표
	(2016. 1. 7) 뉴욕타임즈 인터뷰	• 집권 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45%의 관세 부과 계획을 언급
	(2016. 1. 14) 공화당 경선 6차 TV 토론	•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지속한다면 중국산 제품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엔저 정책을 펴는 일본에 대해서도 비판
	(2016. 3. 10) CNBC 인터뷰	• 세계적인 통화가치 평가절하 현상이 미국경제에 타격을 주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중국이 환율조작과 자유무역 눈속임에서 최고의 대가(grand master)라고 비난
	(2016. 6. 28) 펜실베이니아주 모네선 선거유세	• 한·미 FTA와 NAFTA 등 민주당 행정부의 무역협정이 실패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7대 조치를 발표 • 이 중 중국과 관련하여 △ 환율조작국 지정 △ 불법 수출보조금 지원에 대한 미국 법원 및 WTO 제소 △ 중국이 불법행위를 지속할 경우 관세부과 등 대통령에게 주어진 모든 법적권한 사용 등을 언급
대통령 선거 기간	(2016. 7. 21)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	• 향후 대규모 무역협정은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재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여기에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덤핑, 환율조작을 중단시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언급
	(2016. 9. 26) 미국 대선 1차 TV 토론	• 중국 등 다수 국가들이 자국통화 절하를 통해 이익을 얻는 동안 미국정부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들 국가가 미국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
	(2016. 10. 22)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 선거유세	• 취임 후 100일 구상을 밝히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언급
대통령 당선 이후	(2016. 11. 15) 트럼프 인수위의 취임 후 200일 계획 메모(CNN 입수)	• △ NAFTA의 재협상 또는 탈퇴 △ TPP 철회 △ 불공정 수입 중단 △ 불공정 무역관행 중단 △ 양자 무역협정 추진 등 5개 원칙에 기반하여 취임 첫날 NAFTA 관련 조치 시작, 취임 100일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여부 검토, 취임 200일 NAFTA 공식탈퇴 등을 계획
	(2016. 11. 21) 취임 후 100일간 정책 계획에 대한 영상메시지	• 취임 첫날 TPP 탈퇴를 위한 조치에 나서고 에너지, 기업규제 등의 부문에서도 의회 입법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취임 후 100일간 집중적으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자료: 신문기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최근 미국 의회와 정부도 「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을 통해 중국 등 주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한 환율 압박을 강화

- 「교역촉진법」의 제7장이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¹⁾ 지정과 관련된 통화환율 및 경제정책에 관한 개입(Engagement on Currency Exchange Rate and Economic Policies)인데, 이를 공동 발의한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과 오린 해치(Orrin Hatch), 톰 카퍼(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따서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법안이라고도 함.
- 「교역촉진법」 제7장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환율보고서 작성, 심층분석 실시, 양자협의 강화 및 시정 조치 등을 규정
-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6년 10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분류되지 않음.
- 미 재무부는 ① 대미 무역수지(+200억 달러) ② 경상수지(GDP 대비 +3%) ③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2%) 등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
-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등 6개 국가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는데, 중국은 1개 항목만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조건*에 의해 2016년 4월에 이어 다시 지정
- *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최소 2회는 관찰대상국에 잔류

표 2. 미 재무부의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기준 항목별 평가(2015년 7월~2016년 6월 기준)

구분	대미 무역수지 (억 달러)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규모 (GDP 대비 비중, %)	3년간 변화 (GDP 대비 비중, %p)	규모 (억 달러)	순매수 규모 (GDP 대비 비중, %)	순매수 규모 (억 달러)	지속적 개입 여부
중국	3,561	2.4	0.0	2,609	-5.1	-5,660	x
독일	711	9.1	2.3	3,123	.	.	x
일본	676	3.7	2.6	1,583	0	0	x
멕시코	626	-2.9	-0.8	-317	-2.2	-240	x
한국	302	7.9	2.0	1,071	-1.8	-240	x
이탈리아	283	2.3	1.9	425	.	.	x
인도	240	-0.8	4.2	-160	0.3	50	x
프랑스	180	-0.5	0.4	-128	.	.	x
대만	136	14.8	5.2	758	2.5	130	o
스위스	129	10.0	-1.6	662	9.1	600	o
캐나다	112	-3.4	0.1	-511	0.0	0	x
영국	-3	-5.7	-2.0	-1,612	0.0	0	x
유로 지역	1,305	3.2	1.3	3,804	0.0	0	x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의 對중국 환율압박은 최근에 불거진 일이 아니라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이며, 미국 의회의 입법, 행정부의 대응, 국제사회의 합의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

- 우선 미국 의회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통화 저평가에 대한 제재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

1) 본 보고서에서는 「교역촉진법(2015)」의 ‘심층분석 대상국’이 「중합무역법(1988)」의 ‘환율조작국’과 유사한 개념이므로 ‘심층분석 대상국’과 ‘환율조작국’을 필요에 따라 혼용

- 2003년 이후 미 의회에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중국의 인위적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러 법안이 계속 발의되어 왔음.
- 법안은 주로 △ 중국 등 교역상대국의 인위적인 통화 저평가에 대해 반덤핑규제나 상계관세 부과 △ 상대국 통화 저평가에 따른 미국기업들의 불이익 상쇄방안 도입 △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관세법 개정 △ 상대국 환율에 대한 미국의 평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함.²⁾
- 2007년부터 제출된 법안에 환율 조작(manipulation) 대신에 불균형(misalignment)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해당국의 의도(intent)와 상관없이 환율이 펀더멘털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범위가 확장됨.³⁾
- 이러한 법안들은 회기 내 미처리와 다음 회기 재발의가 반복되면서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의 모태가 됨.
- 다음으로 미국정부는 독자적으로 또는 중국과의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와 환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3월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더 강력하게 기존 무역규칙을 집행해야 하며, 환율 문제가 미국 수출기업에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10월 미 수출입은행 연례 콘퍼런스에서는 중국 등 무역 흑자국가들이 세계의 리밸런싱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며 중국 위안화 절상을 촉구
- 제이컵 루(Jacob Lew) 미 재무장관은 2014년 5월 중국 방문에서 리커창 총리, 왕양 부총리 등과 만나 “중국은 환율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환율 정책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
- 2006년 미국과 중국정부는 정기적인 대화 및 협의 채널인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신설하고, 미국정부는 매년 정기적인 회의에서 위안화 환율을 주요 이슈로 제기
- 또한 미국은 G7 또는 G20 정상회의 등 국제협력 채널을 통해서도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강화
- 2003년 두바이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유연한 환율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채택되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해 통화가치 평가절상 압력을 높인 바 있음.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환율 갈등이 고조된 시기에 개최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에 합의

그림 1. 위안화 환율과 미국의 주요 환율 압박 조치 추이

(단위: 위안/달러)



자료: 미 연방정부 홈페이지(www.state.gov), 미 의회 홈페이지(www.congress.gov)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Annamaria Viterbo(2012),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Monetary Measures: Limitations to States' Sovereignty and Dispute."

3) Claude Barfield(2010), "Congress and Chinese Currency Legis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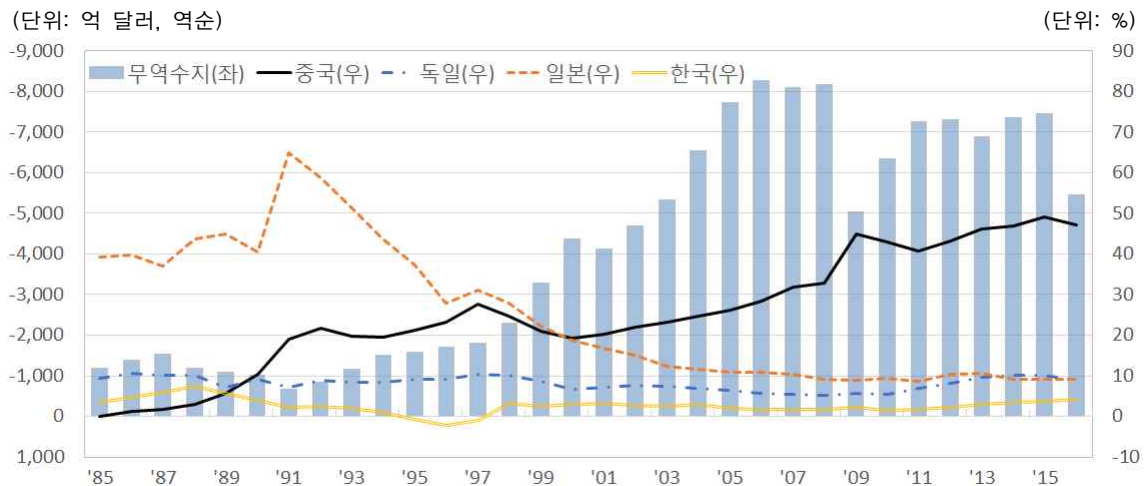
나. 배경: 대중 무역수지 적자 확대, 위안화 저평가, 미국 일자리 감소 등

1)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 속 대중 무역수지 적자 급증

■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증가

-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 규모가 1,500억 달러 전후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그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는 약 8,000억 달러를 기록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세계 교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미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연간 7,000억 달러 전후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 무역수지 적자 비중은 전체의 50%에 육박
- 반면 1980~90년대 미국 무역수지 적자에서 50% 전후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은 2015년 현재 10%로 낮아졌고, 독일과 한국은 각각 9%와 4% 수준을 기록

그림 2.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와 국가별 비중



자료: 미 경제분석국 홈페이지(www.bea.gov).

2) 위안화 저평가 등 중국 수출기업에 유리한 환율개입

■ 미국은 인위적인 위안화 저평가 등 중국의 환율개입을 대중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국 학계와 IMF는 중국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어 대외 균형을 위해 절상이 필요하다는 많은 연구들을 발표
- 2003년 미국 민주당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의원 등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법안(S.1586)을 제출하면서, 당시 미국 학계에서 위안화 저평가가 정도로 판단한 15~40%의 평균인 27.5%를 적절한 관세율로 제시

- Goldstein and Lardy(2009), Cline and Williamson(2010) 등은 경상수지 균형과 같은 거시경제 균형을 달성시키는 환율을 균형 환율로 보는 기초균형환율(FEER: 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 접근법을 통해 위안화 저평가 정도를 추정했는데, 각각 20~25%, 33% 정도 위안화가 저평가되었다고 주장

표 3.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에 관한 연구결과 비교

접근법	설명	저평가 정도	기준시기	연구자
절대적 구매력평가	WDI PPP 사용	- 50%	2008년	World Bank
절대적 구매력평가	Big Mac 지수 사용	- 67%	2010년 1월	The Economist
절대적 구매력평가	Penn effect 고려	+ 5%	2008년 말	Cheung, Chinn, and Fujii(2010)
절대적 구매력평가	Penn effect 고려	- 14.5%~ - 47.5%	2005년	Subramanian(2010)
상대적 구매력평가	1980~2009년 장기실질실효환율 평균기준	- 7.5%	2009년 말	Cheung, Chinn, and Fujii(2010)
행태균형환율 (BEER)	기초경제변수로 생산성 격차와 교역기준 사용	- 2.7%	2009년 4/4분기	Goldman Sachs
기초균형환율 (FEER)	경상수지흑자 GDP 3% 이내 기준	- 32.8%	2009년 3월	Cline and Williamson(2010)
기초균형환율 (FEER)	중국 경상수지 균형 고려	- 20%~ - 25%	2008년 말	Goldstein and Lardy(2009)

자료: 조종화 외(2010),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0-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다만 최근 들어서는 위안화의 저평가가 크게 완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
-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Kessler and Subramanian (2014)⁴⁾은 중국 위안화가 2005년에는 30% 정도 저평가되었지만 현재는 적정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는 지난 20년간 통화 저평가로 수출을 촉진했던 중국의 중상주의적 발전전략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 IMF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연간 대외부문 보고서⁵⁾를 통해 과거에는 위안화 저평가가 대규모 대외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나 최근 몇 년간 위안화가 상당히 절상되어 더 이상 저평가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실질실효환율 기준)

■ 미국의 환율 압박과 위안화 국제화 등으로 중국이 2005년 관리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고 환율제도도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였으나,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및 환율제도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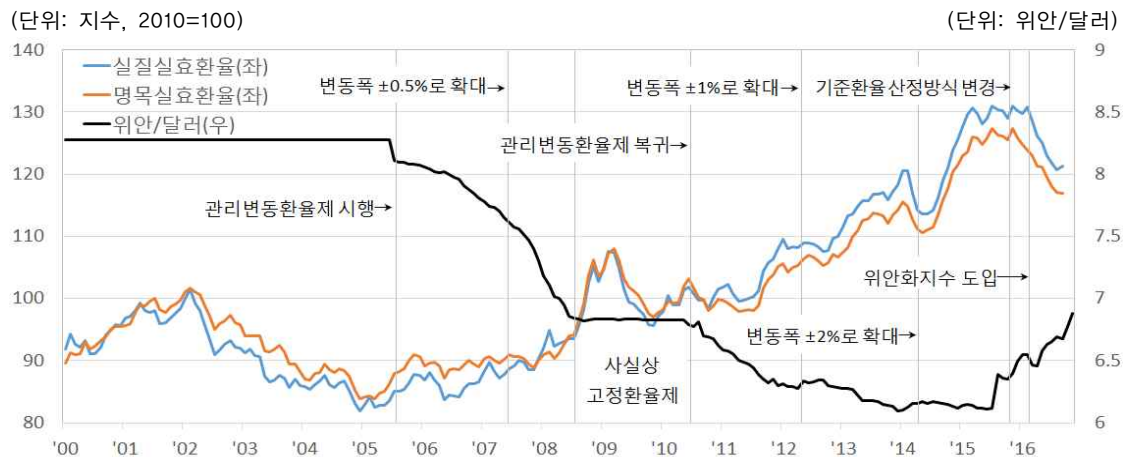
- 중국 위안화 환율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달러당 8.3위안으로 고정되어 있다가 2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18% 하락(위안화 절상)하였고, 금융위기 중에는 다시 달러당 6.8위안으로 고정되어 있다가 2010년 5월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한 이후 2013년 말까지 다시 11% 하락(위안화 절상)

4) Martin Kessler and Arvind Subramanian(2014), "Is the Renminbi Still Undervalued? Not According to New PPP Estimate."

5) IMF(2016), 2016 External Sector Report. 매년 발간되는 동 보고서에서 IMF는 2012년과 2013년에 중국 경제 펀더멘털을 감안했을 때 중국 위안화가 5~10%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했고, 2014년에는 4~12%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2015년부터 평가 기초가 변경되었음.

- 즉 지난 10년간 위안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35% 절상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중국경제 성장둔화와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절하 추세에 있음.
- 중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가치를 감안하여 계산한 명목실효환율 기준으로는 위안화 가치가 같은 기간 45% 까지 절상하였으나 2016년 들어 절하로 반전
- 중국정부는 2005년 관리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일일 환율변동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위안화 국제화의 일환으로 IMF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 편입을 추진하면서 기준환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안화지수를 도입하는 등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환율제도를 개선하였음.
- 2015년 8월, 그동안 외환시장 여건과는 다소 별개로 결정되었던 위안화의 대미달러 기준환율을 시장조성자 은행의 호가 제시 시 전일 외환시장 증가, 외화수급 및 주요 통화의 환율 움직임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 2015년 12월, 중국과 무역 비중이 높은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화, 홍콩 달러 등 13개 주요 교역대상국⁶⁾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지수인 CFETS(China Foreign Exchange Trade System) 위안화 환율지수를 공표함.
- 이에 따라 IMF는 연간 환율보고서⁷⁾를 통해 중국 환율제도에 대한 평가를 Crawling-like arrangement(10단계 중 여섯 번째)에서 Other managed arrangement(10단계 중 여덟 번째)로 변경하였음.

그림 3. 위안/달러 환율과 중국의 환율제도 개선 추이



자료: CEIC; BIS; 중국 인민은행.

- 반면 미국은 중국의 점진적 위안화 절상과 환율제도 개선에 미국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미흡하다고 판단
- 2016년 10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중국정부가 환율 관련 정책에 있어 시장과의 소통을 보다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동 보고서는 중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높은 성장률, 막대한 외환보유액, 양호한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위안화 가치는 중기적으로 절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평가

6) 미국(26.4%), 유로 지역(21.4%), 일본(14.7%), 홍콩(6.6%), 호주(6.3%), 말레이시아(4.7%), 러시아(4.4%), 영국(3.9%), 싱가포르(3.8%), 태국(3.3%), 캐나다(2.5%), 스위스(1.5%), 뉴질랜드(0.7%) 등(괄호 안은 가중치).

7) IMF(2016),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 2016*. IMF는 환율제도의 유연성을 10단계로 구분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③ Conventional peg(1990년대) → ⑤ Crawling peg(2007) → ④ Stabilized arrangement(2009) → ⑥ Crawling-like arrangement(2011) → ⑧ Other managed arrangement(2016)로 평가해옴(※ 한국은 9번째 단계인 Floating으로 평가).

3) 미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

■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가 대중 무역수지 적자 확대, 근본적으로 중국 등의 환율조작,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

-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자국 통화 가치 절하가 미국으로의 수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는 미국산 제품 수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제조업의 쇠퇴와 기업의 해외 이전, 일자리 감소 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함.

■ 일부 전문가와 연구기관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해외제품으로 인해 미국 내 해당 분야의 기업들이 퇴출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므로,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큰 업종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심화되었다고 주장

- Krugman(2010. 1. 1)⁸⁾은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저평가하여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미국과 세계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향후 미국에서 약 140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고 주장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 Economic Policy Institute)의 Scott(2012)⁹⁾은 2001~10년 사이 대중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 280만 개가 없어지거나 대체되었으며, 이 중 70%가 제조업 부문에서 나타났다고 주장
 - 2001~10년 사이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가장 크게 늘어난 산업은 컴퓨터 및 전자기기 부문(약 1,200억 달러, 전체의 45%)인데, 같은 기간 미국 내 일자리 감소도 동 부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약 91만 개, 전체의 33%).

4)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견제

■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국익, 나아가서는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협함에 따라 미국이 중국의 급부상을 저지하거나 견제하려는 의도도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영향

- 중국은 경제력,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을 앞서거나 위협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신흥국과 동북아의 맹주로 부상
 - 중국경제는 교역규모 기준으로 2013년에 이미 미국을 추월해 단일 국가로는 세계 1위를 기록했고, GDP(PPP) 기준으로 2014년에 미국을 앞서 세계 1위 국가로 부상
 - 미국의 국방예산이 시퀘스터(정부지출 자동삭감)로 인해 GDP 대비 3%로 하락할 경우 2025년을 전후해 중국의 실질 국방비¹⁰⁾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기존의 글로벌 경제를 주도해왔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견제 수단으로 위안화 절상 문제가 거론됨.¹¹⁾

8) Paul Krugman(2010. 1. 1), "Chinese New Year," *New York Times*.

9) Robert Scott(2012), "Growing U.S. Trade Deficit with China Cost 2.8 Million Jobs between 2001 and 2010," EPI Briefing Paper #323.

10) 국제사회는 중국의 국방비가 문화 교육 및 과학기술 예산에 은닉 편성되어 있어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공식적인 국방비보다 최소 1.4배 ~ 최대 2배 많을 것으로 추정(The Tokyo Foundation(2011), "Japan's Security Strategy toward China," p. 26).

-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또는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등의 압박 외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 훼손, 남중국해 해상에서의 군사훈련 실시 발언, 러시아와 협력 강화를 통해 중·러 밀월관계 악화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전망

- 향후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① 2017년 상반기 중 단행 ② 2017년 하반기 이후로 계속 연기 등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대별되고, 현재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상황
- 시나리오 ①은 미국이 자국경제 우선이라는 목표에만 집착하고 내부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데 주력하며,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반발할 경우에 발생
- 시나리오 ②는 미국과 중국이 환율문제에 대해 상호 절충점을 찾아가는 실리적 접근을 취할 경우에 발생

가. 시나리오 1: 2017년 상반기 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경우 (양국이 모두 명분에 집착하는 경우, 強對強)

- 트럼프 인수위는 취임 후 100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 등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을 강화
- 트럼프 인수위의 취임 후 200일 계획에 따르면, 취임 100일에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트럼프 정부의 통상분야 인사들도 대중 강경파와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한 인물들로 채워짐.
- 상무부 장관 지명자 윌버 로스(Wilbur Ross), USTR 대표 지명자 로버트 라이시저(Robert Lighthizer)후보 댄 디미코, NTC(National Trade Council)¹²⁾ 대표 지명자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對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음.
- 향후 트럼프는 자신의 대선 공약 추진을 위해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난
- 2016년 12월 2일 트럼프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해 미국 정부가 1978년 이후 고수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고, 중국은 트럼프의 행보에 크게 반발
- 이에 대해 2016년 12월 4일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미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우리에게 물어본 적이 있느냐”고 발언해 위안화 저평가를 계속해서 비난
- 특히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일자리 감소가 주요국의 환율조작, 불공정 무역행위, 미국에 불리한 자유무역협정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중국의 환율조작 및 불공정 무역행위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

11) 조종화, 박복영, 박영준, 양다영(2010).

12) 트럼프 정부에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상정책(trade policy) 및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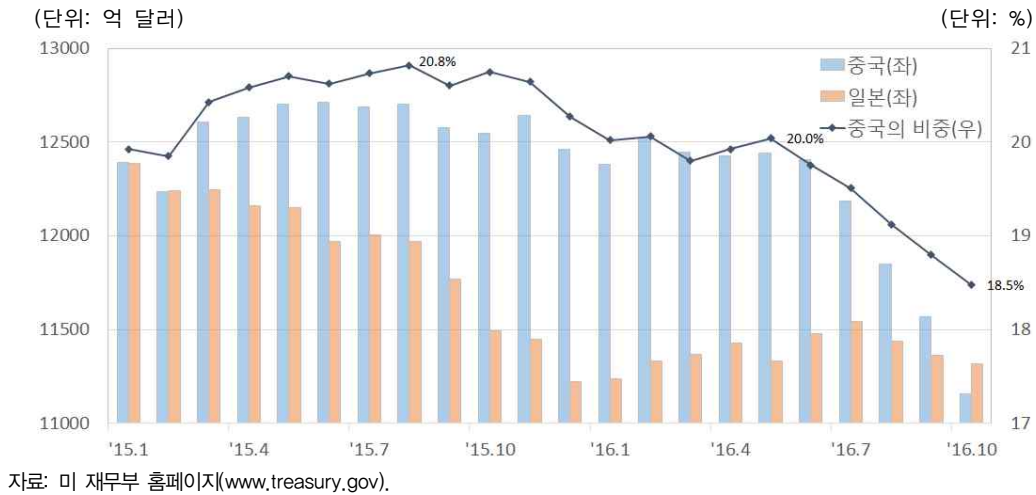
■ 중국은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지 않고 외환시장에도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미국의 환율조작국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

- 중국은 위안화 저평가를 유도하지 않고 있고 IMF 등의 자료를 인용하며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
 - 2016년 11월 28일 이 강 인민은행 부행장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지만, 이는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것으로 (엔화나 유로화 등) 다른 통화에 비해선 절하 폭이 적다”고 발언해 의도적인 위안화 저평가 유도 주장을 반박
 -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C. Fred Bergsten은 중국이 2003~14년 사이에는 위안화 저평가를 위해 매년 3,000억 달러를 매입하는 등 환율 조작을 해왔지만, 그 이후 대규모 자본유출을 경험하고 오히려 환율안정을 위해 평가절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언급(WSJ 2016. 12. 7)
- 중국은 자국 환율제도가 과거에 비해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음을 강조
 - 중국정부는 최근의 중미전략대화(S&ED, 2016. 6)에서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다 2016년 10월부터 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 정식으로 편입되는 등 위안화 시장화 개혁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에 비추어 환율조작국 지정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
- 위안화 가치가 가파르게 절하될 경우 중국은 도리어 이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달러화 공급, 중국 거주자의 해외투자 억제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부각
 -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4년 6월 3조 9,932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4년 말 3조 8,430억 달러, 2015년 말 3조 3,304억 달러, 2016년 11월 3조 516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
 - 중국정부는 2017년 9월까지 국가 핵심사업과 무관한 100억 달러 이상의 해외 M&A와 10억 달러 이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비금융기업의 해외 자회사 대출을 자기자본의 30%로 제한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송금에 상한선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

■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자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변경 등을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도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는 등 미·중 간 환율 갈등이 심화

- 미국이 현 기준으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어려워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변경할 가능성 상존
 - 현재 중국은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기준 ① 대미 무역수지(+200억 달러) ② 경상수지(GDP 대비 +3%) ③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2%) 중 1개 항목(대미 무역수지 200억 달러 흑자)만 충족
 - 2016년 10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 배경을 여행수지 항목을 통한 자금유출로 지목해 실제 경상수지 흑자는 3% 부근일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 요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국, 대만 등 여타국들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시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미국 제품(항공기 등) 구매 중단, 미국 제품(자동차, IT 등)의 중국시장 판매 금지 등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매도
 -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가 2016년 10월 말 현재 1조 1,157억 달러(전체 외국인 보유액의 18.5%)까지 감소해 2015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보유 규모(1조 1,319억 달러)를 하회

그림 4. 중국과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규모 추이



나. 시나리오 2: 2017년 하반기 이후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연기하는 경우 (양국의 실리적 접근이 진행되는 경우)

■ 트럼프 인수위는 취임 100일 이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하면서 물밑으로 양국간 협상을 추진

- 트럼프가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해 파국보다는 건설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
 - 2016년 11월 14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간의 첫 전화통화에서 트럼프는 “중국의 밝은 미래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시 주석과 함께 양국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발언
 - 2016년 12월 7일 트럼프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테리 브랜스테드(Terry Branstad) 아이오와 주지사를 주중 미국대사로 지명
- 트럼프가 상황 변화에 쉽게 변신하는 기업가 출신이라는 점도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실리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일례로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이전 오바마 케어에 대해 줄곧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오바마 케어 중 일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일부 정책에서 대선 후보 시절과 다른 입장을 보임.
- 2000년대 들어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대중 무역불균형 완화, 경제적 실익 챙기기, 중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
 - 그동안 미국은 자국 내 환율조작국 관련 법안 추진, 미·중 전략경제대화, G7 및 G20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환율압박을 지속하였으나, 이것이 실제로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위안화 절상, 외환제도 개혁, 시장개방 등의 진전을 얻는 데 지렛대로 활용

■ 중국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에 대해 겉으로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물밑으로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

-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호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

- 2016년 11월 14일 시진핑과 트럼프 간 첫 전화통화에서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협력만이 유일하게 옳은 선택”이라며 “중·미 협력은 중요한 기회와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어 “양국이 협조를 강화해 경제 발전, 세계 경제성장 촉진, 분야별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자”고 제안
- 중국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막기 위해서, 또는 미국에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는 명분을 주기 위해 위안화 절상, 외환제도 개혁, 시장개방 등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

■ 트럼프 정부는 취임 100일 이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만 지정해 중국과의 극단적인 대결 상황을 회피

-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절상이 아닌 위안화 절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음.
- 위안화 절하 압력에 대응한 중국정부의 조치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신정부가 집권 초기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제한적(WSJ)

3.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영향

■ 향후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 중국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①하에서 영향을 분석

- 영향 분석은 우선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시 미국의 법적 제재에 기초한 직접적인 영향(환율, 투자, 교역)에 초점
- 한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중국의 보복 대응과 미·중 간 갈등 고조 등)에 대해서도 추가

가.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시 미국의 제재 내용

■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과 제재는 2016년 2월에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기초

- 「교역촉진법」의 제7장 ‘통화환율 및 경제정책에 관한 개입’은 1988년 미국의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의 제3장 Subtitle A의 ‘환율과 국제경제정책 조정(Exchange Rate and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ordination)’을 보다 강화하고 구체화한 것임.
- 미 재무부는 1988년 이후 「종합무역법(1988)」에 따라, 2016년 이후에는 「교역촉진법(2015)」과 「종합무역법(1988)」에 따라 반기마다(4월, 10월) 주요 교역대상국 중 환율조작국 및 심층분석 대상국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

표 4. 1988년 종합무역법과 2015년 교역촉진법의 환율조작 관련 부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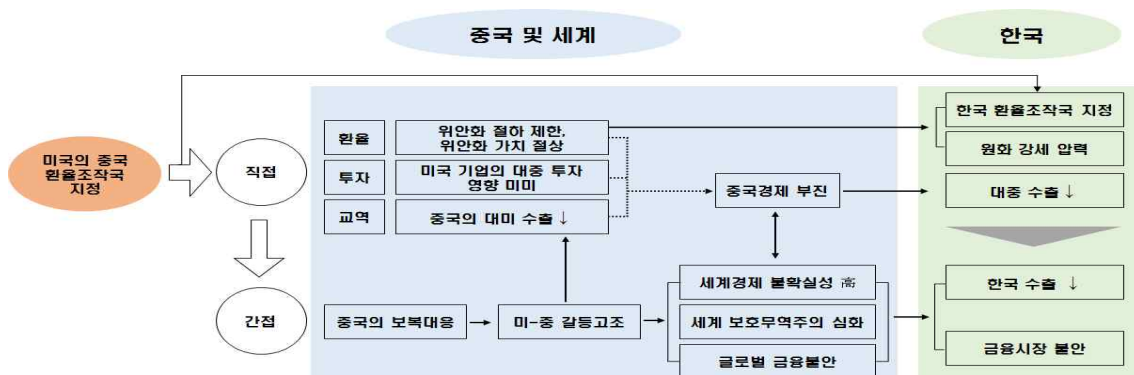
구분	1988년 종합무역법	2015년 교역촉진법
환율조작국 (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요건	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②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 미 재무부 장관은 ①과 ②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 환율조작이 발생하는 지를 판단	①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②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③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 충족) - 심층분석 대상국(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제재 내용	① 미 재무부가 이들 국가의 환율조작을 시정하기 위해 즉각적인 협상을 진행 (IMF내 또는 양자간)	①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②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③ IMF를 통한 환율압박 ④ 무역협정과 연계
환율보고서	미 재무부가 매년 2차례 작성	미 재무부가 매년 2차례 작성
지정 사례	한국(1988~89), 대만(1988~89, 1992), 중국(1992~94)	아직 지정 사례 無 단, 관찰대상국(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2016년 10월) 지정

주: 「교역촉진법(2015)」 하에서의 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요건은 미 재무부가 매 반기 작성하는 환율보고서에서 밝힌 기준.

■ 「교역촉진법(2015)」 하에서 미국은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에 대해 ①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②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③ IMF를 통한 환율압박 ④ 무역협정과 연계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제재

- ①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국은 해당국 내 미국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The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의 자금지원, 보험 및 보증을 금지
 - 개도국의 경우 OPIC 지원이 없으면 현지투자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미국기업의 현지국 투자에 부정적으로 영향
- ②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미국은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에 해당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
- ③ IMF를 통한 환율압박: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측 대표를 통하여 IMF가 해당 국가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환율조작 증거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도록 압박
- ④ 무역협정과 연계: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국과 미국 간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 협상 개시 여부를 평가할 때, 해당국의 통화가치 저평가 및 경상수지 흑자 시정 노력을 고려
 - 미국의 제재는 미국이 심층분석 대상국과의 양자 간 심도 깊은 협의를 개시한 지 1년 후에도 심층분석 대상국의 통화가치 저평가와 무역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
 - 다만 상기 제재가 미국의 경제·안보상 이익을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 실행을 보류할 수 있음.

그림 5.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시 중국 및 한국 경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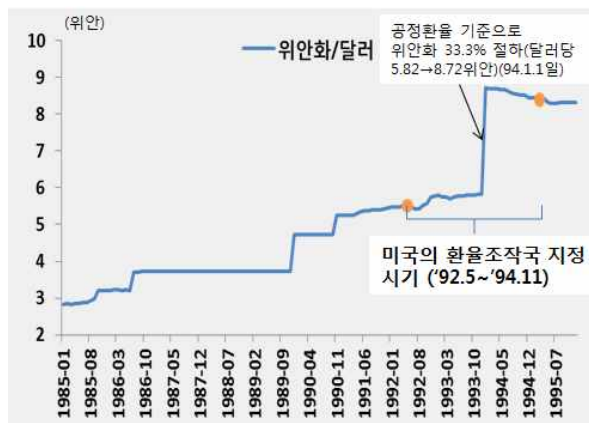


나. 환율 측면

■ [중국]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시 IMF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압박 등으로 중국은 보다 시장 친화적인 환율제도로 개편함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중장기적으로 절상 압력이 고조될 전망

- 2005년 7월 미 의회에서 위안화 저평가와 관련하여 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같은 달 중국은 10년간 지속했던 달러페그제를 폐지하고 통화바스켓에 의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면서 위안화를 2.1% 절상시켜 고시하였으며, 그 이후 위안화를 지속적으로 절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위안화 저평가 관련 비판이 거세지자 중국은 G20 정상회의를 앞둔 2010년 6월 환율제도를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복귀시켰고, 2012년과 2014년 미·중 전략경제대화 직전에는 일일 환율변동폭을 확대한 바 있음.
- 미국은 1992년 5월,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거하여 이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¹³⁾ 이후 미·중 간 환율제도 개혁을 위한 합동경제위원회(Exchange System Reform Working Group of the Joint Economic Committee)의 협의를 거치면서 1994년 1월 중국은 공정환율과 조절환율로 이원화¹⁴⁾되어 있는 환율을 단일화하고 환율결정도 시장 수급상황이 일부 반영되도록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
- 1990년대 들어 조절환율과 공정환율 간의 격차가 확대(1993년 6월 말 공정환율은 달러당 5.7위안, 조절환율은 10.8위안)되고, 이중환율제가 수출에 대한 편법적인 보조금정책으로 간주되어 이중환율제에 대한 비난도 제기(예를 들어 수출기업의 수출 시에는 조절환율 적용, 원자재 수입 시에는 공정환율 적용)
- 1994년 1월 1일 중국은 기준환율을 8.72위안으로 발표해 공정환율 기준으로는 33.3% 절하(달러당 5.82위안 → 8.72위안)하였으나 조절환율(시장환율) 기준으로는 14.7% 절상(달러당 약 10위안 → 8.72위안)

그림 6. 美의 中 환율조작국 지정과 위안/달러 환율



자료: CEIC.

표 5. 1990년 전후 중국의 환율제도

	시기	주요 특징 및 변동 사항
이중환율 제도	'87~'93년	- 기업간 외환거래를 통한 조절환율과 인민은행이 결정하는 공정환율의 이중환율제도 운영 - 무역의 대부분이 조절환율을 통해 거래
단일환율 (관리변동 환율) 제도	'94~'97년	- 환율단일화 (일일 환율변동폭 한도가 $\pm 0.3\%$) - 기업간 외환조절센터 폐지, 은행간 외환조절센터 구축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3. 9), 「중국의 환율제도와 위안화 환율 전망」, p. 11.

13) 미국은 1994년 12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 1992년 환율조작국 지정 당시 미국은 중국이 1990년 이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1989년 말 수준보다 낮게 저평가되어 있으며, 1992년 10월 미국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에도 환율제도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14) 공정환율(公定換率)은 중국인민은행이 결정하는 공식환율, 조절환율(調節換率)은 외환조절센터를 통한 기업간 외환거래로 형성된 시장환율임.

표 6. 1992년 환율조작국 지정 당시와 현재의 중국의 대외 지표

(단위: 억 달러)

구분	1990년	1991년	199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무역수지	87	82	44	2,590	3,831	5,939
대미 무역수지 (중국 통계 기준)	-14	-18	-3	1,523	1,591	1,478
(미국 통계 기준)	104	127	183	3,187	3,449	3,672
경상수지	120	133	64	1,482	2,774	3,306
외환보유액 변동	55	106	-23	5,097	217	-5,127
위안/달러 환율	4.8	5.3	5.5	6.2	6.1	6.2

주: 대미 무역수지에서 중국과 미국의 통계가 차이나는 이유는 홍콩 및 기타국가 경유 수출의 포함 여부와 무역중계상의 이윤 포함 여부의 차이 때문.
자료: CEIC; 미 경제분석국 홈페이지(www.bea.gov).

- 중국은 미국과 다자간 또는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위안화 저평가·외환시장 개입 문제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음.
- 최근 위안화 가치가 중국에서의 자금이탈, 중국경제 부진 등으로 절하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시에는 위안화 가치 절하가 진정되거나 절상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위안화 절상 압력 고조는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

- 2010년 이후 위안/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 간에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위안화 절하시기에 더욱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기록
 - 2010년 6월~2016년 12월 위안화와 원화 환율간의 상관계수는 +0.59
 - 최근의 위안화 절하시기(2014년 3월~2016년 12월) 두 통화간 상관계수가 +0.62로 직전의 위안화 절상시기(2010년 6월~2014년 2월)의 +0.58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위안화와 원화 환율간의 동조화는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달하는 등 한국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

그림 7. 최근 위안/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중국 인민은행; 상관계수는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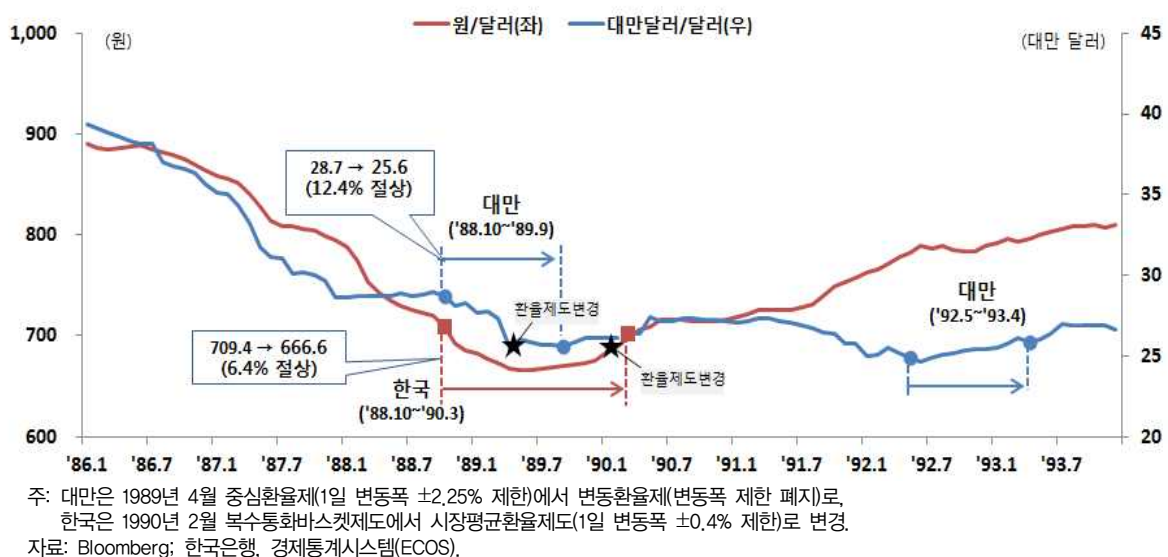
- 실증분석 결과에서 2000~10년 기간 위안화, 달러화, 유로화는 원화에 대해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보이고, 특히 위안화는 달러화와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¹⁵⁾
- 원화환율의 주요 통화에 대한 반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Frankel and Wei(1994)¹⁶⁾의 모형과 같이 스위스 프랑과 대비 주요국 통화 환율을 사용하여 다음의 회귀식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

$$\Delta \log(KRW) = \alpha_0 + \alpha_1 \Delta \log(USD) + \alpha_2 \Delta \log(YUAN) + \alpha_3 \Delta \log(EURO) + \alpha_4 \Delta \log(YEN) + \epsilon_t$$
 단 KRW, USD, YUAN, EURO, YEN은 각각 스위스 프랑화 대비 원화, 달러화, 위안화, 유로화, 엔화를 나타냄.

■ [한국]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준(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2016년 10월)에 따르면 3가지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요건 중 중국은 1개 항목(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을 충족하고, 한국은 2개 항목(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3% 상회)을 충족해 현재 기준으로도 한국이 중국에 비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 대만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우선 지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미국이 중국과 극단적 대결 상황을 피하면서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하거나, 미국 우선 정책 추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1988년 미국의 「종합무역법」 하에서 미국은 한국(1988년)과 대만(1988년)을 중국(1992년)보다 먼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음.

그림 8. 과거 미국의 한국 및 대만 환율조작국 지정 사례와 해당국 환율 추이



15) 허 인, 박영준, 이동은, 오승환(2010),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 pp. 5~6, 오늘의 세계경제, 10-02.

16) Frankel, Jeffery A., Wei, Shang-Jin(1994), "Yen Bloc or Dollar Bloc? Exchange Rate Policies of the East Asian Economies," NBER.

-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원화가치가 가파른 강세를 보이고, 정책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추진 필요성이 높아짐.
- o 1988년 10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원화가치는 6.4% 절상(조작국 지정 시점 달러당 709.4원 → 저점 666.6원)되었고, 1990년 2월에는 한국이 기존의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 보다 시장 친화적인 시장평균환율제도(1일 변동폭 $\pm 0.4\%$)로 변경
- o 2016년 10월에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원화가치는 저평가되어 있고,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

다. 무역 및 통상 측면

■ [중국]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

- 우선 중국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이 금지되는 제재의 경우 미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규모 중 외국, 특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서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o 2009년 이후 미국정부의 재정지출 삭감 등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 o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외국 국적의 계약자 점유율은 3.7%(2011~15년 평균)에 불과(미국 국적 점유율이 9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홍콩 국적 계약자 점유율은 0.034%로 미미하고 중국 본토 계약자 점유율은 50 위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¹⁷⁾

표 7. 연도별 미국 연방정부 조달금액

(단위: 억 달러)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연방정부의 총 조달 규모	6,048	6,201	5,390	5,394	5,176	4,616*	4,451	4,374

주: * 미국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이 단행된 시기.

자료: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의 자료를 한국조달청(<http://www.pps.go.kr/gpass/jsp/advance/usa/info.gps>)에서 재인용.

- 다음으로 중국 내 미국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자금지원, 보험 및 보증 금지하는 미국기업의 중국투자를 약화시켜야 하나, 실제로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o 미국은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 대한 OPIC 지원을 이미 금지하고 있음.¹⁸⁾
- 간접적으로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 대응 등 미·중 간 갈등 고조가 직접적인 제재 보다 무역 및 통상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¹⁹⁾

17) 미군 주둔이 많은 지역인 아시아, 중동지역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참고로 한국은 전체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0.28%를 차지해 미국, 스위스, UAE에 이어 전체 4위를 기록(KOTRA(2016),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 유망품목 분석조사」, p. 89, KOTRA 자료 16-051.)

18) 미 연방정부 홈페이지(<https://www.state.gov/e/eb/rls/othr/ics/2013/204621.htm>) 중 2013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 China

19) 중국은 최근 중국 내 해외기업의 민간투자 제한을 점차 철폐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러한 흐름이 뒤바뀌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기업(애플, 보잉사, GE 등)에 부정적인

- 실제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은 미국의 의로기술 업체인 메드트로닉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1억 1,8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12월 7일)하고, 앞으로 미국의 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12월 14일, 차이나데일리)
- 미국도 환율조작국 지정과 병행해 통상법 232조와 2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거나, 통상법 301조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 상존

표 8. 미 대통령이 사용 가능한 주요 무역제재 조치 및 근거

구분	발동 조건	가능한 조치
통상법 232(b)조 (1962년 무역확대법)	수입으로 인해 국가안보상 위협이 발생할 경우	관세부과, 쿼터
통상법 201조 (1974년 통상법)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발생 시	최대 150일 동안 국제수지 흑자국들에 대해 15% 관세부과, 수입물량제한
통상법 301조 (1974년 통상법)	FTA상 미국 권리 침해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발생	보복조치(관세, 쿼터)

자료: 김원기, 윤여준(2016), 「미국 신(新)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과 시사점」, p. 8, 오늘의 세계경제, 16-32.

■ **[한국]**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중국의 타격과 피해가 한국에 기회를 주는 반사이익보다 중국 교역 둔화, 미·중 갈등 심화, 한국으로의 환율 및 통상 분쟁 확산 등으로 한국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 미국 조달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참여 제한,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기업이 중국 기업에 비해 일부 유리해지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미국 조달시장에서 중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업종별로도 한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경쟁도가 낮기 때문
- 미국의 보복관세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됨으로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부과되는 위협요인도 존재²⁰⁾
-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미·중 갈등 고조,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중국²¹⁾ 등 세계 교역 둔화, 한국으로의 환율 및 통상 분쟁 확산 등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세
- 한국의 대중 수출 중 60% 이상이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가공무역과 보세무역이 타격을 받고, 업종별로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²²⁾
 - * 2015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 일반무역(내수용)이 34.0%, 가공무역(49.6%)과 보세무역(15.7%) 등 재수출용이 65.3%를 차지함.
 - * 업종별로는 일반무역 비중이 높은 자동차·기계·철강·식료품의 경우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수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컴퓨터 및 통신기기의 경우 대중 수출이 상당 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15% 관세를 매길 때 중국 경제성장률은 1%p 하락(일본 다이와증권), 중국 경제성장률 1%p 하락 시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하락(IMF)²³⁾

영향을 줄 것임. 또한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로 이동하는 등 미국 일자리 중대효과도 미미할 것임(Grace Shi(2016. 11. 18), "Trump vs. China," *Cornell Current*).

20) 2016년 12월 12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각각 52.15%, 32.12%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

21)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은 장기적으로 4,200억 달러 감소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6% 하락할 것으로 예상(Moodys).

22) 양평섭, 임호열, 이호진(2016), 「미국 신(新)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과 한·중 경쟁에의 영향」, p. 12, 오늘의 세계경제, 16-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시사점 및 대응 방향

가. 시사점

■ 향후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불확실하나, 환율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은 고조될 전망

-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을 협의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외환제도 개혁 등을 이끌어내는 카드로, 광의로는 중국이 미국의 국익(경제, 외교, 안보와 관련)에 협력하는 자세로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어 미국의 환율조작국 압박은 지속될 전망
- 중국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을 중국의 국익과 양국 협력관계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미국의 압박에 순응하지 않고 역공이나 보복 대응태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직접적으로 환율, 통상 측면에서 중국경제에 타격을 주나, 한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경우 위안화 절상 압력이 고조되고, 대미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
- 한국의 경우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아 위안화와 함께 원화도 동반 절상 압력이 높아지고, 중국 수출 둔화 시 한국의 대중 수출도 둔화될 전망
- 한국의 경우 이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시 한국도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 이 경우 미국은 한국에 대해 원화 저평가 개선,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
- 중국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제한 등으로 한국기업이 일부 유리해질 수 있으나, 그 효과는 부정적 영향에 비하면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자체보다 이에 따른 파장, 간접적인 영향이 더욱 우려

-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시 중국이 보복 대응을 취함에 따라 미·중 갈등이 고조될 전망
- 나아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세계적으로 환율 및 통상 분쟁이 심화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가능성

나. 대응 방향

■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 정가의 움직임과 중국정부의 대응 움직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

-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움직임이 해당국의 통화가치 저평가 및 환율제도 개선이 주된 목적인지, 아니면 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를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
 - o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변경, 중국뿐만 아니라 여타국에 대해서도 지정할 가능성 등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
-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 중국의 대응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

■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

- 한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 요인보다 저유가, 인구 고령화, 기술경쟁력의 차이, Global supply chain 등 비환율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객관적인 수치 및 분석 결과를 제시
 - o 본 연구에서 2000년 1/4분기~2016년 2/4분기 기간을 대상으로 VAR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경상수지 변동에 세계교역량, 교역조건, 실질실효환율, 내수 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영향이 큰 요인은 교역조건(37.3%), 내수(17.6%), 환율(8.1%), 세계교역량(1.6%) 순이었음.²⁴⁾
 - o 한시적으로 미국 물자 구매 확대 등을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
- 최근에는 한국이 원화가치 절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고,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 o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은 환율 흐름의 기초를 바꾸기보다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있음을 수치로 보여줄 필요
 - o 불가피하게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경우 현물시장 중심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을 저지하기 위해 세계 주요 경상수지 흑자국들과 협력 및 공조를 추진할 필요
 - o 독일, 일본, 중국 등과 공조해 경상수지 흑자가 비환율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을 부각

■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고,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불확실성 고조, 글로벌 금융불안 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

-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절상에 따른 원화 강세 압력을 완화하고, 대중국 수출 부진에 대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에 대비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국제공조를 통해 자유무역주의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해서는 통상 관련 쟁점 사안 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o WTO, IMF, OECD, G20 등에서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위한 노력을 전개
 - o 한·미 FTA의 긍정적 영향, 한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 현황과 일자리 창출 등 양국 교역에 따른 수혜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
 - o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미국의 요구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도 반영되도록 FTA 재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
- 글로벌 자금 흐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시장 불안 및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모색

24) 2년 후 경상수지 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결과를 사용.

-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한·일 통화스와프에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도 추진하며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할 필요
- 가계 및 기업 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파른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시장금리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한 가계 및 기업에 대해 한시적인 자금 공급방안을 마련 **KIEP**

별첨 1. 2000년 이후 환율조작 관련 미국의 제재 법안 및 대응

시 기	내 용
2003년	• 미 의회의 108대 회기(2003~04년) 중 13개의 관련 법안 제출 • (9월) 민주당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의원 등 상원의원 13명은 미국이 중국과의 위안화 저평가 및 환율 조작(manipulation) 관련 협상에 실패할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7.5%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1586)을 제출 - 유사한 법안(H.R.3364)을 하원의원 5명도 제출(10월) • (9월) 미 재무부가 중국정부와 시장기반(market-based) 위안화 가치 산정에 대해 협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S.Res.219)이 상원을 통과(9월) • (10월) 미 대통령이 중국정부에 WTO 가입 시 제시한 약속 이행과 시장기반 환율제 도입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H.Res.414)이 하원을 통과
2004년	• (7월)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의원 등 하원의원 3명은 미 재무부에 중국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방안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H.R.4986) 제출
2005년	• 미 의회의 109대 회기(2005~06년) 중 25개의 관련 법안 제출 • (2월) 슈머 의원 등 상원의원 14명은 중국 위안화 저평가에 따른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관련 법안(S.295)을 다시 제출 • (5월) 로저스 의원 등 하원의원 2명은 위안화 저평가에 따른 미국기업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H.R.2414)을 다시 제출 • (7월) 공화당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 의원 등 상원의원 2명은 중국의 수출 보조금 지급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Tariff Act of 1930)」 개정안(S.1421)을 제출 - 유사한 법안(H.R.3283)이 하원을 통과(7월)
2006년	• (2월) 민주당 바이런 도건(Byron Dorgan) 의원 등 상원의원 2명은 중국이 「무역법(Trade Act of 1974)」 401-409조에 따른 때까지 정상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를 철회하는 법안(S.2267)을 제출 - 유사한 법안(H.R.728)을 하원의원 72명도 제출(2월) • (12월) 부시 행정부의 중·미 전략경제대화(SED: China-US Strategic Economic Dialogue) 시작: 미국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해 중국정부의 환율 조작 중단을 촉구
2007년	• 미 의회의 110대 회기(2007~08년) 중 28개의 관련 법안 제출 • (2월) 민주당 존 스프라트(John Spratt) 의원 등 하원의원 3명은 슈머 의원이 제안한 법안과 유사한 중국 위안화 저평가에 따른 중국 수입품 추가 관세 부과 관련 법안(H.R.1002)을 제출 • (5월) 2차 중·미 전략경제대화 • (6월) 민주당 맥스 보커스(Max Baucus) 의원 등 상원의원 14명은 환율 불균형(misalignment) 국가에 대해서 △ 미 재무부 평가보고서 제출(정부개입이 명백할 경우) △ IMF와 다른 국가에 지원 요청(180일 이후에도 조정이 안 될 경우) △ 연방정부의 해당국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중지 △ 반덤핑 관세 증가(360일 이후에도 조정이 안 될 경우) △ WTO 제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S.1607)을 제출 - 유사한 법안(H.R.2942)을 하원의원 78명도 제출(6월) • (6월) 민주당 크리스토퍼 도드(Christopher Dodd) 의원 등 상원의원 11명은 △ 환율조작국에 대한 시정 계획안 마련 △ 해당국과 양자 협상 개시 △ IMF 이사회가 해당국에 대해 시정 요구할 것을 요청 등 1988년 제정된 「환율과 국제경제정책조정법(Exchange Rates and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ordination Act of 1988)」 개정안(S.1677)을 제출 • (12월) 3차 중·미 전략경제대화
2008년	• (6월) 4차 중·미 전략경제대화 • (12월) 5차 중·미 전략경제대화
2009년	• 미 의회의 111대 회기(2009~10년) 중 21개의 관련 법안 제출 • (6월) 민주당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의원 등 상원의원 4명은 보커스 의원이 제안한 법안과 유사한 환율 불균형 국가에 대한 평가 및 시정 계획 관련 법안(S.1254)을 제출 - 유사한 법안(S.1027)을 상원의원 8명도 제출(5월) • (7월) 오바마 행정부의 미·중 전략경제대화(S&ED: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시작: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외교문제도 논의 대상
2010년	• (3월) 슈머 의원 등 상원의원 20명은 환율 불균형 국가에 대한 평가 및 시정 계획 관련 법안(S.3134)을 다시 제출 - 유사한 법안인 「공정무역을 위한 통화개혁법(Currency Reform for Fair Trade, H.R.2378)」이 하원을 통과(9월) • (5월) 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별첨 1. 계속

시 기	내 용
2011년	• 미 의회의 112대 회기(2011~12년) 중 21개의 관련 법안 제출 • (2월)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의원 등 상원의원 13명은 통화 저평가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S.328)을 제출 - 유사한 법안(H.R.639)을 하원의원 235명도 제출(2월) • (10월) 브라운 의원 등 상원의원 23명이 제출한 환율 불균형 국가에 대한 평가 및 시정 계획 관련 법안인 「환율감독개혁법(Currency Exchange Rate Oversight Reform Act of 2011, S.1619)」 이 상원을 통과 • (5월) 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2012년	• (5월) 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2013년	• 미 의회의 113대 회기(2013~14년) 중 2개의 관련 법안 제출 • (3월) 민주당 샌더 레빈(Sander Levin) 의원 등 하원의원 158명은 통화 저평가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H.R.1276)을 다시 제출 • (6월) 브라운 의원 등 상원의원 24명은 2011년 상원을 통과한 환율 불균형 국가에 대한 평가 및 시정 계획 관련 법안(S.1114)을 다시 제출 • (7월) 5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2014년	• (7월) 6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2015년	• 미 의회의 114대 회기(2015~16년) 중 6개의 관련 법안 제출 • (5월) 공화당 패트릭 티버리(Patrick Tiberi) 의원 등 하원의원 3명이 제출한 법안 「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hancement Act of 2015, H.R.1907)」 이 제정 -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평가, 심층 분석(enhanced analysis) 대상 국가와 협상, 양자간 협상 개시 1년 후에도 관련 우려 지속 시 제재 조치 시행, 환율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 • (6월) 7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2016년	• (2월) 교역촉진법 발효 • (6월) 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 (6월) 교역촉진법에 따른 미 재무부의 1차 환율보고서 발표: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10월) 미 재무부 2차 환율보고서 발표: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자료: 미 연방정부 홈페이지(www.state.gov), 미 의회 홈페이지(www.congress.gov)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